



주간 통일정세

2010-1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공안기관, 국경탈북자 가족·화교 단속 강화(3/2, 좋은벗들)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와 인민보안성(경찰)이 함경북도, 평안북도, 량강도 등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를 막기 위해 탈북자 가족과 화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전함.
- 北김정일 공개활동 ‘주춤’…연초에 무리했나?(3/2, 연합뉴스)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월 과거 12년간 동월 평균 3배에 육박할 정도로 왕성한 공개활동을 펼쳤음.
 - 이에 비해, 2월에 접어들면서는 지난 1월 10차례 방문한 산업시설을 4차례만 방문하였으며, 군부대는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음.
- 北 김정일의 ‘철강사랑’…김책제철소 잇단 시찰(3/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철’을 생산하는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두 달여 만에 다시 시찰, 이는 김위원장의 3월 들어 첫 공개활동
 - 시찰중 김 위원장은 “우리식 용광로에 의한 주체철 생산체계를 확립해 철강재 생산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축성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면서 철강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노동당의 김경희(경공업부)·장성택(행정부) 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리제강(조직지도부)·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수행
- 北, 남한 탈북자와 통화한 주민 총살(3/5, 열린북한방송)
 - 열린북한방송은 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 “1월 말 함흥의 한 군수공장 노동자 정모씨가 자신이 쓰던 중국 휴대전화가 집에서 발각돼 총살됐다”고 보도
 - 방송은 정모씨가 그동안 탈북한 남측의 친구에게 민생소식을 알려준 것을 확인 보도
- 北김정일, 2.8비날론 행사참석…파격행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일 현대화 공사를 끝내고 16년만에 재기동에 들어간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함흥시 군중대회에 참석



- 해마다 김일성·김정일 지시나 당정책 관철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경축 같은 주요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리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이날 오후 10만여명의 함흥시민들이 운집한 군중대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소식을 녹음 및 녹화 중계로 상세히 전함.

■ 김정일동향

- 3/ 4 통일애국투사 리경구에게 80돌 생일상 전달(3/5, 중통)
- 3/ 5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3/5, 중통)
 - ‘주체철’을 생산하는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두달여 만에 다시 시찰해 주목
- 3/ 5 제 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 홍석형(함경북도위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당부장), 주규창·이제강·이재일(제1부부장) 등 동행(3/5, 중통)
- 3/ 5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노동자 성현애, 평양예방약공장 노동자 김재순, 평양시설건설사업소 노동자 박성희 등에게 감사전달(3/5, 중통)

■ 기타동향 (대내 정치)

- 駐北 독일 대사, ‘북-독 외교관계 설정 9돌’ 기념 연회 개최(3/2, 중방)
 - 박길연(외무성 부상), 오룡철(무역성 부상) 등 참석
- 만포시,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 보고회 개최(3/3, 중방)
 - 김명건(만포시당 책임비서) 참가
- 2012년 자력경쟁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주요과제 강조(3/4, 노동신문)
 -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봉쇄책동 타파, 경공업부문 기술개건으로 인민 생활 향상, 새로운 경제조직사업 강화 등을 포함.
- 김정일, 3월 중순 방중 계획(3/5, 교도통신)

나. 경제 관련

- 대풍그룹, ‘北경제인프라구축 10년계획’ 추진(3/2, 연합뉴스; 닷케이)
 -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달 세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과 곧 설립할 예정인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국가예산과 별도로 ‘경제인프라구축 10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0년을 내다보고 진행되는 경제기반 구축 계획은 먹는 문제,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의 6가지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것으로, 국가예산에서 완전히 독립된 프로젝트”라고 말함.



- 박 총재는 위 계획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데 집중돼 있으며, 조선은 앞으로도 국가 소유에 기초한 경제운동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대풍그룹은 국가예산 외에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해 국가개발의 목표를 실현하자는 것으로 자본주의 나라의 여느 회사와 다르다”라고 주장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관계자는 평양 등 8대 도시를 신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자본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 평양·라진·청진·김책·신의주·함흥·원산·남포 등이 포함되며 철도와 도로의 확장 역시 추진 중
 - 평양의 경우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하며 10만 가구 주택 계획
- 北, 화폐개혁 실패 시인(3/2, 교도통신)
 -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으로 인해 통화 공급과 재화 분배 과정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통지문을 해외 주재 북한 공관에 보냈다고 익명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
 - 평양소주 미국 수출길 끊겨(3/2, RFA)
 -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평양소주를 팔아온 ‘당씨주류도매’(Tang’s Liquor Wholesales)의 당갑정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반짝 인기가 있었는데 맛이 떨어져 주문이 없다보니 1년 전부터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北, 독자적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 개발(3/2, 연합뉴스)
 - 러시아 R-TV방송은, 북한의 IT 전문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붉은 별(Red Star)’이라는 이름의 자체 OS를 개발하여 사용한 사례를 소개
 - 방송은 설치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리드미(Readme) 파일에 김위원장의 이름으로 OS에 대한 중요성이 설명되어 지고 있다고 전함.
 - 북한판 윈도 ‘붉은별’… 러 RT-TV 처음 공개(3/3, 연합뉴스)
 -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 기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는 전혀 다르지만 겉모습과 사용 환경은 윈도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님.
 - 인터넷과 별도로 운영되는 북한의 폐쇄적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듯 기본 검색엔진으로 ‘내나라 BBS’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해당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통합사무처리프로그램 우리’가 있으며 ‘문서처리체계 서광’, ‘선전물’ 등의 프로그램이 달려있음.
 - 北에서 식량 노린 살인, 강도 속출(3/3, NK지식연대)
 - NK지식연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8회 생일이었던 지난달 16일 함경북도 부령군 고무산역에 세워져 있던 식량 적재 열차를 둘러싸



고 난투극이 벌어져 보안원들과 주변 군부대가 총격 끝에 진압했다고 함경북도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해 밝힘.

- 위 단체는 “사건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주민들은 쌀 몇kg 때문에 총까지 쏘 노동자를 죽인 무장대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김정일 생일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연루자들이 간단히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함.
- 김정일 방중 목적은 경제지원(3/4, 요미우리)
 - 요미우리신문은 3월 중순이후로 예상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지원을 받아내는데 있다고 보도
 - 실제로 북한은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권을 중국기업에 넘기는가 하면 4월 하순 지린성 훈춘시와 나선시를 잇는 도로의 정비에도 착공할 예정이라고 북·중 관계자들은 전함.
- 北, 환율·쌀값 또 폭등…한주 사이 100% 이상↑(3/4, RFA; 데일리 NK)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함경북도 주민의 전언을 인용, “3일 현재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 쌀 1kg이 1천100원으로 갑자기 올랐다”면서 “노란 봄철을 앞두고 쌀값이 자꾸 올라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함.
 - 열린북한방송은 회령지역의 경우 중국 돈 1위안에 대한 암시장 환율이 닷새만에 3배 이상 급상승했다고 말함.
 - 또한 대북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머지 않아 북한 돈의 가치가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북한 신권보다 달러나 위안을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전함.
- 평양경제 마비…상점 텅비고 호텔 한산(3/4, RFA)
 -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지난달 말 대북 지원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미국 민간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양시내 시장과 상점이 대부분 닫혀 있고 문을 열어놓은 곳에도 물건이 거의 없었다”, “평양의 경제활동이 마비돼 있었다”등의 평양 상황을 밝힘.
- 北 ‘석탄법’ 제정…외자유치 시사(3/7, 민주조선)
 - 북한이 ‘공업의 식량’이라고 주장해온 석탄의 탐사와 공급, 이용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6장 76조’로 구성된 ‘석탄법’을 제정
 - ‘민주조선’이 5회(1월20일~2월12일)에 걸쳐 다룬 ‘석탄법’ 법규해설 시리즈에서 확인
 - 앞서 북한은 1993년 4월 ‘지하자원법’을 제정했고 2006년 11월에는 내각에서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
 - 특히 국가가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은 물론 “석탄 탐사 및 탄광 개발, 석탄 생산과 이용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



과 교류·협조를 발전시킨다”는 방침도 적시돼 있어 주목

■ 기타동향 (대내 경제)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궤기모임진행 (3/2, 중방)
- 김철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2월 공업총생산액 초과 완수(3/2, 중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원호식 연속조괴공정’ 현대화 완공, 당 중앙위 감사전달 조업식 진행(3/3, 중방)
 - 홍석형(책임비서), 오수용(내각 부총리)등 참석
- 植樹節, 나무심기 강조(3/2, 노동신문)
 - 당·정 간부들, 전국 각지 궤기모임 참가 및 근로자들 참석
- 조선천연기념물도감(3권) 새로 편찬 발간(3/2, 중통)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새 ‘복합기능성 건강식품’ 완성(3/3, 중통)
- 국가과학원 대형전자현시판(대형전광판) 개발 도입(3/4, 중방)
- 만경대, 칠골, 금천 남새전문농장 등 봄철 영농지원 농기계 수리정비 완료 및 협동농장 지원(3/4, 평방)
- 산림청, ‘싸리나무’로 북한 황폐림 복구(3/7, 연합뉴스)

다. 군사 관련

- 北 서해 포사격 김정은이 지휘(3/2, 동아일보)
 - 북한 교위 소식통은 올 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밝힘.
 - 포사격 훈련은 김정은의 대학졸업논문을 시험해 진행한 것으로 포사격 총지휘관도 김정은이 맡았다고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북한군 MDL 넘다 경고사격에 복귀(3/4, 연합뉴스)
 - 지난 2일 동부전선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한 직후 다른 북한군 수명이 이를 추적하고자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나 남한군의 경고사격으로 북으로 바로 복귀
- 김일성, 핵공격 대비 초호화 지하빌라 건설(3/5, AP뉴스)
 - 오스트리아에서 16년간 잠적했던 북한의 전직 군수담당 정보요원 김중률(75)은 4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사치스러운 사생활 폭로 서적을 냄
 - 김 씨는 핵무기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빌라, 김 전주석의 식습관과 취미 등에 대해 증언



■ 기타동향 (대내 사회·문화)

- 최상급 축구연맹전 1차 경기 진행(3/1, 중통)
- 올림픽 연대성 송구(핸드볼), 체육단 송구 감독 및 청소년, 지도교원 모여 모하메드 벤크레이라(국제송구연맹 강사)의 강습 참가(3/3, 중통)
- 쇼팽(폴란드)탄생 200돌, 기념 영화 감상회 진행(3/3, 중통)
 - 한철(문화성 부상) 駐北 폴란드 대사 등 참가
- 공동구호 관철... 시, 군 군중대회, 전국 각지에서 진행(3/4, 중방)
- 2010 아시아축구연맹 도전자컵 경기 우승 북 대표단 귀국(3/4, 평방)
- 北 여성 '문신 스타킹' 유행(3/5, RFA)
- IOC, 北밴쿠버올림픽 참가에 11만5천달러 지원(3/7, RFA)

마. 6자회담(북핵)동향

- 北, 북미 직접대화 거듭 요구(3/3, 로이터통신)
 - 전용룡 제네바 주재 북한 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은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를 일축
 - 또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 없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덧붙임

2. 대외정세

- 北 ‘아리랑’팀, 베트남 집단공연 지원(3/5, 연합뉴스)
 - 북한의 ‘아리랑’ 공연지도단 선발팀이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하노이 정도 1천년 기념 공연을 자문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에 입국했다고 사이공 티엠티지 인터넷판이 보도

■ 기타동향 (대외)

- 김영남, 알제리 대통령 73회 생일 및 리비아 공동체선포 33돌 즈음 해당국 대통령에게 각각 축전(3/1, 중통)
- 김영남·박의춘, 2.28 칠레 강진피해 관련 대통령, 외무상에게 위문전문(3/1, 중통)
- 미국의 MD수립 박차에 전쟁억제력 강화의 필요성 역설(3/2, 노동신문)
- 일본의 재일조선학교 정부지원 배제 움직임에 대한 맹비난(3/3, 노동신문)
- 밴쿠버 동계올림픽(2.12-2.28) 80여개국 2,600명의 선수들 참가(3/4, 중방)
- 일, 하토야마 정권은 과거 대결론의 연속...새로운 북-일관계 개선을



- 또 “5.1절 통일 행사와 북남 노동자들의 연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평양에서 진행하며 올해 부문별, 산별 단체들 사이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은 5~6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힘.

■ 기타동향 (대남)

- 국회 외통위 ‘북인권법’ 통과에 대한 강한 비난(3/2, 노동신문)
- ‘3통 문제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진행(3/3, 중통)
 - 남측은 북남관계 발전과 개성공단 활성화에 부정적 장애를 조성
- 남 정부의 친미, 친일 외교정책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친 반역(3/3, 평방)
- 범민련, 재미본부의 2010년 연차회의(2.27, LA) 개최소식 및 재중조선인총연합회의 잡지 ‘백두-한라’ 2월호 발간소식 보도(3/4, 중통)
-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3월 개성지구관광, 4월 금강산 관광개방 재개에 대해 남측이 불허할 경우 관광사업관련 모든 합의, 계약 파기 언급(3/4, 중통)
-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 남 NK지식연대의 ‘북 식량강탈사건’ 보도는 날조된 모략극(3/4, 중통)
- 남 통일부장관의 통일부 창설 41주년 기념연설 비난(3/4, 노동신문)
- 6.15남측위, 공동 회의차 방북(3/7, 중통)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단(단장: 김상근 상임대표)이 6.15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6일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6자 각국에 ‘유연한 입장’ 요구”(3/7)

- 중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각국이 기존의 입장을 유연하게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됨.
-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중국이 최근 관련국들과의 연쇄접촉 과정에서 각국에게 기존의 입장을 유연하게 해보자는 뜻을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각국은 각기 어떤 액션을 취할 지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기회가 생긴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유연한 입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각국이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음.
-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달 말 미국과 한국 등과의 연쇄접촉 과정에서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미 추가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6자회담 각국에 협상재개를 위해 각국이 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제안을 제시하고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음.

● “中, 6자회담 당사국에 협상재개 요청”(3/7)

-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협상 당사국인 각국에 협상재개를 요청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음.
- 7일 이 방송에 따르면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6일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한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 5개국에 협상 재개를 요청했으며,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6자회담 당사국에 협상 재개를 위한 각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음.
-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그러나 “아직 회답이 온 나라는 없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협상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음.
- 그는 협상 재개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미



국과 북한 간에 신뢰관계가 없어 현 상황에서는 협상 진전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 그는 각국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입장 표명의 회답을 기다리는 한편 올 상반기 중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피력했음.

● 中 외교부장 “6자회담 재개 확신”(3/7)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양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 중인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 각자가 한반도의 비핵화란 목표를 견지하고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6자회담이 재개돼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
- 그러나 양 부장은 최근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의 구체적인 재개 시점이나 재개 조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양 부장은 “지난 1년간 6자회담은 사실 곁절을 많이 겪었다”고 인정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란 목표와 6자회담이란 효과적인 다자협의 채널을 포기하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양 부장은 또 한국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이웃국가인 한국이 올 연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회의와 함께 앞서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회의가 모두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G20 회의에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 목표 ▲세계경제의 불균형해결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 ▲출구전략 문제 등 거시정책에서의 각국의 협력강화 ▲각종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회의가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란 원칙하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미국 지도자의 달라이 라마 면담 등 양국 관계를 훼손시킨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훼손된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음. 그는 “미국이 우리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의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양 부장은 그러면서도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방중, 중국과 양국 관계와 유관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중국은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최근 미국 고위관료의 방중이 양국 관계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했음.

- 그는 또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초청으로 3월 하순 러시아를 공식 방문, 러시아에서 열리는 ‘중국어의 해’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소개했음. 그는 지난해 착공을 시작한 중·러시아 간 송유관이 올해 말이면 완공돼 내년이면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은 동북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지역과의 협력을 중시, 국경을 초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음.
- 양 부장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에 대해서는 “아시아에 속한 중국은 지역 간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그는 중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브릭스(BRICs) 국가, 중동, 아프리카 등 양자 및 다자 관계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올해 외교는 각종 정상회의와 상하이(上海) 엑스포의 성공개최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음.
- 양 부장은 회견에서 최근 중국이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에 강경한 외교정책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음. 그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라면서 “다른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강하게 침해한 뒤 이를 당연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해 최근 미국 등 서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서방이 초래한 측면이 크며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했다.

● 말聯 외무 “北 6자회담 속히 복귀해야”(3/6)

- 말레이시아가 6일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와 “모든 현안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음. 말레이시아 아니파 아만 외무장관은 이날 코타키나발루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하루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말레이시아는 6자 회담이 모든 현안을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최상의 틀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북한과 가까운 관계에 있음.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은 11개월 전 북한이 회담을 거부한 뒤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美 “北, 대화복귀 동의해야”(3/6)

- 미국은 5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거듭 희망하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 복귀와 비핵화 조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이 올 상반기 내에는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언급과 관련, “중국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6자회담이 다시 시작되기를 보길 원한다”면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中 “상반기중 6자회담 재개 목표”(3/5)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이 올해 상반기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중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이같이 기대하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5일 보도했다.
- 중국이 2008년 12월 이후 교착상태인 6자회담의 재개 일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북한이 유엔제재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한·미가 조건 없는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회담 재개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부부장직을 떠나 정협 외사위 부주임으로 자리를 옮긴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독자적인 의견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와 북한간의 이 같은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그는 또 “6자회담 진전에 있어 최대의 어려움은 관련국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각측이 기본적인 신뢰를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중국의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이 한·미와 북한에 대해 서로 양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작성할 구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논평했다.
- 진 부원장은 이어 관련 당사국들이 최근 들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기대한 대로 회담이 상반기 중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스티븐스대사 “6자회담 열려있어..北선택할 때”(3/4)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4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미·북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에너지 지원 등 모든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차 극동포럼 초청강연에서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으로 복귀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로 일치된 행동을 보였다”며 “6자회담의 문은 열려 있으며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분단된 한국과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은 20세기의 비극”이라며 “우리는 한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는 그날을 앞당겨야 하며 이는 또한 남·북한 모두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특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중용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미·중 관계는 한·중관계와 마찬가지로 복잡하면서도 큰 관계”라며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포괄적이고 협력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중국을 방문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베이징 인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표와 위성락 본부장이 방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양국의 비준이 남아있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부터 모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FTA의 비준을 원하고 있고 진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유외교 “6자회담 연계시 북미대화 가능”(3/3)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6자회담 재개전 북·미 양자대화 여부와 관련,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6자회담과 연계돼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더이상 미·북 회담을 계속 갖는 것에 대해 스스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유 장관은 이어 “현재 북한은 김계관 부상이 3월초에 미국 학술단체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거기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난 바 없다”고 설명했다.
- 그는 6자회담 재개시점과 관련, “1년 4개월 동안 6자회담의 모멘텀을 잃게 되면 (의장국인) 중국도 부담스럽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에 나오는 게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이 열리는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공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개시기를 예단하기 이르다”며 “다만 분위기가 3~4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수준으로 최근 워싱턴 특파원단에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 유 장관은 또 4자 예비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얘기할 분위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996년도에 4자회담이 예비회담부터 시작해 본회담이 6차례 제네바에서 열린 바 있는데, 지금은 비핵화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경우 4자가 참여하는 형식의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만 그런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아직 언제 방문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 그는 이밖에 ‘2+2’(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의 개최시기와 관련, “아직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가급적이면 올 상반기 중에, 6.25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미국측이 조만간 날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 “中, 6자복귀 최종설득..北동의시 일정회담”(3/2)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최근 진행된 일련의 관련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최종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설득노력은 고위인사를 추가로 평양에 파견하거나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중국은 최근 관련국 협의를 정리해 6자회담이 열리기 전 북미 양자대화를 열고, 6자회담 중이나 회기를 전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예비회담 등을 여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북미 양자회담의 성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북한이 동의할 경우 중국은 곧이어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일정 등을 회담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 현안에 정통한 북수의 외교소식통들은 2일 “현재의 관건은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문제”라며 “관련국 협의를 통해 미국측이 북미 대화에 탄력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국이 곧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을 최종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의 설득 노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따라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중국의 최종설득 노력을 지켜본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이달 중순께 추진, 베이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등에서 북한의 6자 복귀의사를 천명할 가능성을 등을 주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설득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끝나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4월 중순 사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



며, 회담이 열릴 경우 2박 3일 정도의 일정이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음.

● “中, 6자회담 재개 3단계 방안 제안”(3/2)

-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3단계 방안을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타진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1일 전했다. 중국이 타진한 3단계 방안은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대화에 이어 6자회담 참가국들간의 예비 회담, 공식적인 6자회담 재개가 열리는 순임.
- 소식통들은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 정부의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은 또 러시아, 일본, 북한 등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공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의 제안에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요구해 왔던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요구해 왔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회담과 관련한 문제도 중국 측이 제시한 방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6자재개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추진(3/2)

-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만간 회담이 재개될 경우 기존의 비핵화 합의와 맥락이 다른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Comprehensive Resoultion Roadmap)의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 새로운 로드맵은 ‘신고 및 검증 단계’에서 비핵화 과제가 중단된 뒤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인식에 따라 회담 초기에 전체 비핵화의 목표와 대략적인 조치 내용,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정치·안보 및 경제적 보상내용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회담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분석됨.
- 이런 방안에 대해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을 제시한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 적극적 동의하는 입장이며, 의장국 중국도 유사한 생각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북한의 경우 평화협정 논의를 강조하고 있어 회담이 열릴 경우 반대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커 실제 회담에서 북한과 나머지 국가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은 조만간 최근의 관련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최종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설득노력은 고위인사를 추가로 평양에 파견하거나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 북미 양자회담의 성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북한이 중국이 마련한 '6자 재개방안'에 동의할 경우 중국은 곧이어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일정 등을 회담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에 정통한 북수의 외교소식통들은 “현재의 관건은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문제”라며 “관련국 협의를 통해 미국측이 북미 대화에 탄력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국이 곧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을 최종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의 설득 노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따라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즈워스 “6자회담 ‘상당히 빨리’ 재개 기대”(3/1)

- 아시아를 순방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이 ‘상당히 빨리’ (fairly soon)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27일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일본 도쿄의 데이코쿠 호텔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포함해 5개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국무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신속히 일을 진전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6자회담 복귀와 복귀시점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보즈워스 대표의 이런 발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유명한 외교통상장관과 회담한 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 징후가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한 데 이은 것으로, 지금까지 신중한 화법을 구사해 온 보즈워스 대표의 발언 가운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시사한 가장 긍정적인 언급임.
-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3~4월중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보즈워스 대표는 특히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동의(agree)한다면 6자회담은 곧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공식적인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음.
-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 이전의 추가 북·미 대화 개최 가능성과 관련, “현 시점에서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 “우리는 지난해 12월 평양에서 매우 유용한 양자대화를 가졌고, 그래서 다음 순서는 6자회담 프로세스의 공식적인 재개가 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물론 우리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양자대화를 갖는 데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자간 회담(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있다”고 강조, 가급적 추가 북·미 접촉없이 6자회담으로 직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6자재개시 평화협정 ‘예비회담’ 부상>(3/1)

- 북핵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하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 논의를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남북한과 미국, 과 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협상을 ‘예비회담’ 형식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일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이미 9.19 공동성명에 분명히 포함돼있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평화협정), 경제, 에너지지원, 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등 제반 요소를 어떻게 배열(sequencing)하는지를 놓고 참가국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평화협정을 개시하기 위한 조건들이 특히 관심사”라면서 “평화협정 협상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으며, 협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현 시점에서 중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이는 내용상으로 평화협정 논의의 본격적 시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 관련국들 사이에 이견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어떤 내용도 정해진 것 없다”며 “우리의 입장은 6자회담이 다시 열리고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에만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클린턴 “北·이란, 국제사회에 계속 반항”(3/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불행하게도 북한과 이란과 같은 일부 국가가 국제사회와 그들의 의무에 계속 반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각)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발효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자신들의 노선을 변화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NPT 성공의 핵심은 NPT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구조였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프라하에서 밝힌 대로, 규칙은 구속력이 따라야 하며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미국은 전 세계적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협상 중인 핵무기 감축 협정, 다음 달 열릴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거론했음.
- 클린턴 장관은 “곧 나올 우리의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시대의 사고를 뛰어넘을 것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역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수와 역할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 그는 “오바마 정부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추진하



고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을 위한 조약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핵 비무장화를 향한 진전에 대한 우리의 NPT 약속을 재확인하고, 핵비확산 약속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대한 평화적인 목적의 핵에너지 접근보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 “美, 김계관 방미前 6자복귀 협약 요구”(3/4)

- 미국은 학계 초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허용하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해 ‘확실한 약속’(commitment)을 할 것을 중국과 뉴욕채널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핵 정세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4일 “미국은 6자회담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북·미 추가접촉을 갖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한다면 이를 계기로 6자회담에 앞서 북·미 추가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어 “최근 김계관 부상의 방미 허용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접촉, 구체적으로 김 부상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단지 접촉을 위한 접촉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에번스 리비어)는 김 부상과 리군 외무성 미국국장 등을 이달중 미국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초청하기로 하고 미 국무부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상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inquiries)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미국은 중국이나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메시지가 올 경우 김 부상의 방미를 허용하고 학술단체로 하여금 비자신청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미 추가접촉의 시기는 학술행사 준비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중·하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김 부상은 뉴욕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참석을 계기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특사와 연쇄적으로 만나 북·미 추가대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외교소식통은 “김 부상의 방미는 작년 스티븐 보즈워스 방북에 따른 답방의 형식인데다 학술단체의 초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



연스러울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약속이 분명하게 나와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김계관 부상의 방미가 추진되는 과정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격 방중해 6자회담 복귀를 천명하면 일이 매우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상황이 매우 가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본토에서 북·미대화를 갖는 형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6자회담 재개 직전에 베이징 또는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북·미 추가대화를 가질 가능성도 여전히 상정돼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음.

● 美 “김계관 비자발급 문제 타진받아”(3/4)

- 미국 국무부는 3일 미 학술단체 초청으로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추진중인 것과 관련,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상의 방미 문제와 관련, “그를 미국에 오게 하는 초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그것은) 민간 차원의 초청(private invitation)”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그(김계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inquiries)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또한 “그들이 비자 발급과 관련해 물어왔던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비자)신청이었는지는 모른다”면서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 그는 김 부상이 다음주 워싱턴에 오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김계관이 공식적인 비자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뉴욕으로 오라는 초청을 그가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과 미얀마(버마)간의 핵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많은 기회에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북한과 버마간의 접촉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핵협력 문제에 대해 정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버마는 지난해 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지지조치를 취했다”면서 “버마와 양자대화에서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北-시리아 핵협력의 미얀마 재연 방지 부심”(3/3)

-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미얀마 군사정권 고립화 정책을 깨고 대화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북한과 시리아 간 핵협력이 미얀마에



서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며, 지금까지 이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보도했음.

- 신문은 ‘백악관, 버마(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 유대 증대에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는 미얀마가 북한과 군사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해 미얀마 군사정권에 북한 군사기술의 구매를 중단토록 설득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소형 무기는 물론 미사일 부품과, 가장 걱정스럽기는 핵무기와 연관될 수 있는 기술을 구매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래 지금까지 4차례 미얀마와 대화를 가진 데 이어 5번째 대화를 곧 가질 예정임.
- 한 고위 관계자는 이들 대화에서 “미국이 가장 단호한 태도를 취한 대목은 북한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우리는 미얀마에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시간을 두고 보면 그 말이 먹혔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문은 지난 2007년 9월 가동 직전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폭파된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이 북한의 도움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짐을 상기시키고, 미얀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우려에는 이러한 “시리아 교훈”이 깔려 있다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의 분석을 인용했음.
-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관계는 2007년 시작돼 오래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6월 결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과 관련해 미얀마의 존재가 “과거보다 훨씬 커 보이기 됐다”고 미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 최근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군사정권의 탄압이 심해짐에 따라 미국 의회와 인권운동 단체들 사이에선 오바마 행정부의 대 미얀마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 측은 물론 의회 일부와 전문가들도 미얀마와의 대화가 앞으로도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1월 공저로 발표한 ‘버마의 핵 동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관계에 대한 우려의 첫 번째 근거로 미얀마가 이미 10메가와트 연구용 원자로 건설 협정을 러시아와 맺은 사실을 들었음.
- 보고서는 두번째 근거로, 미얀마에 비밀 핵시설이 있다는 반체제 단체들의 많은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신고 핵활동이 존재하지 않나 의심해볼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보고서는 특히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을 도왔던 북한의 남천강무역 회사가 불분명한 목적으로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사실에 주목했음. 신문은 3번째 우려의 근거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약 8년 전부터 미얀마 학생들이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핵관련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을 들고 “그 숫자가 수십명이 아니라 수백명”이라고 지적했음.

● 北, 북미 직접대화 거듭 요구(3/3)

- 북한은 2일 핵 문제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6자회담 복귀 요구를 일축했음. 또 핵 문제가 해결되려면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용룡 제네바 주재 북한 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은 이날 제네바 군축회의(CD)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를 일축했음.
-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 없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 회담에 즉각 복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음.

● 美고위관계자 “핵무기 극적 감축 계획”(3/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면적인 핵정책 재검토의 일환으로 미국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극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1일 밝혔음.
-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AFP통신에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검토는 “예산에 반영된 투자를 통해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유 핵무기를 극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재래식 무기의 억지력에 좀 더 많은 역할”을 보여줄 것이며, 지하 목표물을 관통하는 저강도 (low-yield) ‘병커 버스터’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은 배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관계자는 “이번 정책 재검토는 핵무기 확산을 되돌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진전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병커버스터의 경우 미국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이란 핵시설을 겨냥해 개발 중인 것으로, 북한은 미국의 병커버스터 개발에 대해 “제2의 조선전쟁 도발계획”이라고 강하게 비난해 왔음.
-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핵 정책이 ‘핵태세 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에 포함돼 있고, 이 보고서에는 부시 행정부에서 결정된 몇몇 계획을 취소하거나 뒤엎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관련한 최종 옵션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당초 이 보고서는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달 1일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발표 일정이 한 달 연기된 뒤 다시 이달 중순으로 재차 발표가 연기된 상태임.

- AFP통신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의 조건을 공개적으로 천명할지에 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했음. 미 조야 일각에서는 생화학무기로 공격하는 국가에 대해 핵무기 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과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 미국은 현재 2천2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러시아는 3천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우다웨이 “김정일 방중 환영..시기 미정”(3/7)

-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언제든 방문을 환영한다고 6일(현지시각) 밝혔음.
- 우 대표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부대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3월 방중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과 중국은 지도자의 상호 방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은 김 위원장이 언제 오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음. 우 대표는 김 위원장이 최근 3년여 동안 여러 차례 중국 방문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김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이는 2006년 1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임. 우 대표는 다만 (3월 방중설에 대해) 현 상황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자신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지 않으며 명확한 정보도 없다고 선을 그었음.
- 방중 성사 시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 재건에 필요한 도움을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길 원하고 있음.

● “김정일, 3월 중순 방중 계획”<교도통신>(3/5)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월 중순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중국·북한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4일 밝혔음. 이 소식통들은 북한이 중국에 5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직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문의했으며 양국이 현재 이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음.
-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은 통화개혁 실패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직후 중국을 방문하면 전인대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모인 중국 지도부와 지방 정부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소식통들은 또 중국도 중국 입장에서 북핵 6자회담의 4월 재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中공안 억류 탈북자 ‘구명’ 호소” <대북매체> (3/4)

- 중국 선양(瀋陽) 공안의 구류소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가 국제전화로 구명을 호소해왔다고 대북 단파 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이 4일 밝혔다.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1월28일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진입하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이성철(38.가명)씨가 구류소내 공중전화로 3일, 4일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연합뉴스 기자에게 말했다.
- 탈북자 이씨는 또 지난 1월26일 우리 측 선양 영사관에 들어가려다 붙잡힌 김영남(28.가명), 박영호(48.가명)씨와 탈북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하다 검거된 여성 7명도 함께 구류소에 억류돼 있다고 전한 것으로 방송 측은 덧붙였다.
- 이 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탈북자 이씨는 작년 9월 북한을 탈출한 뒤 계속 우리와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중국 공안의 구류소는 정식 감옥이 아니라 조사를 받는 곳이어서 탈북자도 돈을 주면 공중전화를 쓸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측은 “영사관 구내로 들어오기 전에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그런 상황을 알기도 어렵지만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면서 “만약 사실일 경우, 검거된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중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중국 공안은 작년 10월 ‘국경절’을 앞두고 탈북자 일제 단속을 벌여 선양에서만 80명 이상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中 “김정일 방중 관련 정보 없다” (3/4)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친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의 언론매체들이 3월 말에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것 같다”고 보도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 그는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에는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토록 하는 전통이 있으며 이런 전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같이 보충 발언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친 대변인은 또 지난달 23일 방중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면담에 이어 톈진(天津)과 동북 3성을 방문했던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북한으로 돌아갔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조선(북한)



국의 대북 지원이나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마이니치는 이 관계자가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3남 정은씨와 동행할지는 “현 시점에서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한편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동북 3성을 둘러보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음. 김 위원장이 2001년 방중시 베이징,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등을 둘러봤고, 2006년에는 이창(宜昌), 광저우(廣州) 등을 둘러봤다는 점에서도 이번에는 동북 3성을 발길을 돌리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음. 베이징 외교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베이징 주변이나 동북 3성을 둘러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北공안기관, 국경 탈북자 가족·화교 단속 강화”(3/2)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와 인민보안성(경찰)이 함경북도, 평안북도, 량강도 등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를 막기 위해 탈북자 가족과 화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2일 전했다.
- 이 단체의 소식지에 따르면 보위부와 보안성은 탈북자 가족들이 외화를 바꾸거나 많은 돈을 사용하면 돈의 출처를 밝히도록 추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확인을 하고 있음. 또 탈북자 가족들과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미행을 하거나 집을 수색하는 등 위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좋은벗들은 “탈북자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의심이 가는 사람이면 수첩에 이름을 올려놓고 사람을 미행시키거나 주위를 배회하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러 세워 몸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인민보안성은 국경지역의 화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는데, 각 지역 보안서에서는 화교들이 그동안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음. 그동안 북한의 화교들은 탈북자 브로커들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받고 탈북자 가족의 탈북을 돕거나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중개루트임.
- 이외에도 북한은 국경 주변에 전화탐지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음. 좋은벗들은 “전화기를 소지하다 걸리면 반죽음이 될 정도로 공포취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작년말 화폐개혁과 시장폐쇄 등의 조치 이후 북한내부사정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가운데 지난달 8일 보위부와 보안성이 연합성명을 통해 “불순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보복성전”을 호언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北김영일, 김정일 방중 사전답사 중”(3/2)

-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의 중국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사전답사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음. 김영일 국제



부장은 지난달 23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첫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데 이어 24일 장가오리(張高麗) 텐진(天津) 시 당서기, 27일 왕민(王珉) 랴오닝(遼寧)성 서기, 28일에는 쑨정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당서기와 만나는 등 동북 3성 방문 일정을 진행중임.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2일 “아직 김 부장이 귀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의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문제에 대한 북·중 간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방중하면 김 부장의 ‘동선’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적어도 김 부장이 방문한 곳 중에 한 곳은 김 위원장의 동선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특히 “김 부장이 동북 3성을 순회하면서 현지 당 서기들과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중 경제협력 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방중 건을 중국 측과 협의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북측의 고위인사가 북한을 방문할 때 그 동선이 비밀에 부쳐지던 과거와는 달리 김 부장의 이번 방중 동선은 관영 신화통신과 동북 3성 현지 신문 매체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도 외교가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선 후 주석의 구두 친서를 전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직후 김 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점으로 미뤄 그가 김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갖고 왔으며 김 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음.
- 김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끝나는 3월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北김영일, 中동북서 잇단 ‘경협 행보’>(3/1)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을 잇따라 방문, 북·중간 화두로 떠오른 양측 접경지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협 행보’를 벌이고 있음. 김 부장 일행이 지난달 28일 지린성을 방문,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서기와 면담했다고 길림일보(吉林日報)가 1일 보도했음.
- 쑨 서기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중국 국무원이 확정된 ‘창지투(長吉圖.장춘-길림-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을 소개하면서 “도로망과 기초 설비 건설 분야에서 지린성과 북한 간 새로운 합작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양측 간 교역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 역시 “경제·무역과 문화 등의 영역에서 양측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측 경제 협력에 의욕을 보였다.
- 김 부장의 지린성 방문은 지난해 중국 국무원의 승인으로 본격화된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과 관련, 양측 간 현안으로 부상한 나진항과 청진항 합작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중국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가 진정한 동북아 물류 거점이 되려면 바닷길이 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 나진항 진출에 공을 들여왔음. 그러다 지난해 지린성 훈춘(琿春)과 북한의 원정리-나진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진항을 수출 가공과 보세, 중계 무역 기능을 갖춘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개발기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음. 북·중 양측은 170km에 이르는 지린성 투먼(圖們)-청진항 구간 철도 보수에도 합의했음. 중국으로서는 나진과 청진항에 진출할 길이 열린 것임.
- 북한도 경제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된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 북·중 경제 협력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음. 김 부장은 쑨 지린성 서기를 면담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에는 랴오닝(遼寧)성을 방문, 왕민(王珉) 랴오닝 서기와 만나 압록강 유역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음.
- 김 부장의 랴오닝성 방문은 신 압록강대교 건설을 위해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중국의 우하이룽(吳海龍) 외교부 부장조리가 지난달 25일 단둥(丹東)에서 단둥-신의주를 잇는 신 압록강대교 건설 협정을 체결, 이 다리 건설이 구체화된 직후 이뤄진 것임.
- 최근에는 북한이 위화도와 황금평 등 압록강의 섬들에 대한 개발권을 중국 기업에 부여, 자유무역지구로 개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음. 북한이 화폐 개혁 실패 이후 외자 유치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김 부장이 랴오닝과 지린을 잇따라 방문, 경협 행보를 이어 가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 대한 북·중 합작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남북한 중개무역업자 첫 입건(3/4)

- 일본 오사카(大阪)부 경찰 외사과는 4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남북한간 아연 무역을 중개한 혐의(외환관리법상 중개무역 금지 위반)로 오사카시에 주소를 둔 무역회사 A사의 사장(54)을 불구속입건했음. 일본 내에서 중개무역 금지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음.
- 오사카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07년 6월 북한 무역회사가 한국에



수출한 아연 208t을 증개한 혐의를 받고 있음. A사 사장은 경찰에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40차례에 걸쳐 북한산 아연 1만 2천t을 한국에 수출하는 걸 증개했고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물자도 증개해 약 2천500만엔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2004년 2월 유엔 결의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을 개정했고 2006년부터는 북한과 관련된 중개 무역은 경제산업상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음.

● 50개 민간단체, 日조선학교 무상화 요구 성명(3/4)

- 한일과거사청산을 위해 활동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50여 개 단체가 모여 조직한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 사업공동추진위원회’ (이하 ‘100추위’, 대표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가 4일 일본 정부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음.
- ‘100추위’는 성명서에서 “고교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는 10여 개의 조선학교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선학교의 학생들을 일본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역사성과 현실성 모두를 무시하는 차별적 처사임이 틀림없다”며 “식민주의 청산을 진정으로 바라는 세계인들은 이번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그 시금석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지난 1월 29일 일본 각의는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4월부터 공립 및 사립뿐만 아니라 조선학교를 포함한 브라질인학교, 중화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들이 연간 12만엔(155만원 정도)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지난해 말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은 “북한을 제재 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문부과학상에게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난달 “조선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고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음.
- ‘100추위’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외국인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회’(재특회)가 ‘조센진은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숩 버리자’, ‘조센진들은 밤길을 조심하라’며 조선학교에 대한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북한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하토야마 총리가 공언한 과거사 청산과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한편 재일외국인의 인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인 ‘외국인학교·민족학교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유지(有志)회’는 최근 하토야마 총리에게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아이의 학습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제도 실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음.

● “일본, 北미사일 방어 태세 완비” <英신문>(3/3)

- 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든지 일본의 준비태세가 완비돼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일 보도했음. 이 신문의 국제담당 칼럼니스트인 사이먼 티스달은 이날 ‘일본은 북한에 대해 준비돼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은 이제 평양에서 무엇을 발사하든지 준비돼 있으며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음.
- 도쿄 북쪽 이타마현 이루마 기지의 히로시 다니구치 공군 소령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이 감히 공격해온다면 우리에게는 행운이다”라며 “일단 사정권 내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음.
- 이 기사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자신감은 통솔 하에 있는 무기들에서 나옴. 미국이 설계하고 일본이 제작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는 2007년 이래 일본을 둘러싸는 6개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의 하나임. 트럭에 탑재되는 직사각형의 상자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4기 씩 장착되는데 첨단 레이더가 설치된 6척의 해군 구축함과 연계돼 있음.
- 이들은 일본 자위대의 첫 번째 탄도미사일방어 체제로 연내에 배치가 완료됨. 이는 미국이 동유럽에 도입하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은 유형으로 최근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대만에 판매하기로해 논란이 일었던 미사일과 비슷한 것임.
- 일본은 전후 헌법에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력 사용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1960년 미·일 안보협정은 일본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이 칼럼은 풀이했음.
- 최근 일본의 방어 및 안보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과의 영토분쟁, 중국의 빠른 군사력 증강,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등 인근 지역에 잠재적인 화약고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임.
- 나아가 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철수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 등 동맹국에 대한 의구심도 일본의 무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이 칼럼은 분석했음. 이 칼럼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대공 방어에 실패해 패배했다”며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끝맺었음.

마. 기타

● WHO 사무총장 다음달 방북(3/7)

- 마거릿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다음달 26일부터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유엔 산하기구인 WHO



사무총장의 방북은 지난 2000년 그로 할렘 브루틀란트 사무총장의 방북 이후 10년만임. 찬 사무총장의 이번 평양방문은 지난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인 린 파스코 유엔 사무차장에 뒤이은 유엔 고위관리의 방북으로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지 주목됨.

- 한 외교소식통은 “유엔 고위관리 방북의 일환으로 WHO 사무총장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 만료되는 유엔의 대북전략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 차원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지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WHO 사무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유엔 산하기구들의 대북지원이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핵 등 정치사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앞서 파스코 유엔특사는 지난달 16일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유엔 기구 한두곳의 고위급 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릭 라로슈 WHO 사무차장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대북의료 지원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 라로슈 사무차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세계보건기구의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 북한은 130가구당 한명꼴로 약 9만여 명의 가정의를 확보하는 등 북한 주민 700만명이 혜택을 입고 있다”며 대북의료 지원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지난해 WHO를 통한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1천300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주로 말라리아 방역과 영·유아 및 신종플루 관련 의약품 지원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북한에는 WHO 외에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식량농업기구 등의 유엔 산하기구들이 활동 중이며 이중 한 두기관의 고위인사가 추가로 방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로버트 박, 정신병원서 풀려나”(3/6)

-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박씨가 5일(현지시간) 주대법원 심리를 거쳐 퇴원하게 됐다.
- 박씨의 한국내 지인은 6일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미국내 박씨의 친구 G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며 “이메일에는 퇴원을 요구하는 박씨의 요구대로 주대법원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불안증세 때문에 부모와 지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지인은 또 “박씨가 곧바로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주변에서는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인은 이



어 “앞서 박씨가 따로 나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자신이 북한에서 고문받았음을 밝히고 있다”며 “박씨의 이메일 내용과 구성을 보면 정신이 맑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 충격에서 벗어나 섭생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IOC, 北밴쿠버올림픽 참가에 11만5천달러 지원”(3/6)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11만5천200달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IOC가 보내온 전자우편을 인용, 북한 선수 5명이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훈련비를 지원받아 그중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고현숙, 남자 피겨 스케이팅의 리성철 선수 등 2명이 출전했다고 밝혔음.
- IOC는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명 선수에 대해 1인당 매달 1천500달러씩 지원했음. IOC 산하의 올림픽연대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올림픽 중계료의 수익금으로 북한과 같은 가난한 나라의 올림픽 참가를 돕고 있음. IOC 관계자는 “201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도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北억류 로버트 박, 정신병원 입원”<VOA>(3/5)

-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박씨가 지난달 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5일 보도했음. 이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박씨의 ‘신앙적 스승’인 존 벤슨 목사는 인터뷰에서 “부모와 지인들이 지난달 27일 박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면서 “박씨는 사람이 공포에 직면할 때 다급해하는 불안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대화할 때 호흡 소리가 매우 격할 정도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했음.
- 벤슨 목사는 또 “현재 박씨는 퇴원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씨의 요구에 따라 곧 퇴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담당 의사와 부모, 지인들은 박씨가 한동안 더 병원에 머물며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북한에 들어간 뒤 국경 지역에서 심각한 구타를 당했고 새해가 열리기 전에 평양으로 압송됐다는 얘기를 박씨한테 들었다”며 “하지만 박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불안증세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아리랑’팀, 베트남 집단공연 지원(3/5)

- 북한의 ‘아리랑’ 공연지도단 선발팀이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하노이 정도(定都) 1천년 기념 공연을 자문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에 입



국했다고 사이공 티엠티지(誌)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음. 이번 주 베트남에 도착한 선발팀은 북한 문화성 아리랑공연부의 송평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집단체조, 무대장치, 카드섹션, 무대음향과 조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 송 부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집단공연이 가장 독창적으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 인적자원을 포함한 기본 공연환경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발팀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들과 모임을 가진데 이어 하노이의 미딩경기장(4만석 규모)과 호찌민 주석묘소 등 공연이 이뤄질 장소 등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집단체조와 카드섹션 등으로 구성된 ‘아리랑’은 연인원 10만명이 출연하는 대표적인 북한의 공연 중 하나로 꼽힘.

● WHO “지원 프로그램 효과..北 의료상황 개선”(3/4)

- 세계보건기구(WHO)는 4일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내에서 수천명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공급하며 병원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북한의 의료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에릭 라로슈 WHO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6년부터 남한 측의 기금 지원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의 임신부 사망률이 2005년 이후 2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 라로슈 사무차장은 멜버른 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2년 후 수술 중 사망환자의 수가 73.4% 줄었고, 설사 환자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WHO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산소와 신생아실, 소아과 등에서 근무할 6천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등 북한 의료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3천 20만 달러가 집행됐음.
- 그 결과 현재 북한은 130 가구에 한 명 꼴로, 약 9만여 명의 가정의를 확보하게 됐다고 라로슈 사무차장은 설명했다. 라로슈 사무차장은 북한의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으나, 의료 서비스가 각 지역사회까지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 北, 독자적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 개발(3/2)

- 북한이 리눅스 기반의 독자적 컴퓨터 운영체제(OS)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음. 러시아 R-TV 방송은, 북한의 IT 전문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붉은별’(Red Star)이라는 이름의 자체 OS를 개발했다면서 평양 김일성 대학에 유학 중인 한 러시아 대학생이 최근 이 OS를 사용한 사례를



나. 미·중 관계

● 중국 “갈등해소 위해 구글과 협의중”(3/5)

- 중국 정부가 해킹과 인터넷 검열 문제로 공방을 벌였던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리이중(李毅中) 공업 정보화부장이 5일 밝혔다. 리 부장은 이날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꼽히는 양회에 참가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은 지난 1월 중국이 자사 해킹사건의 배후라며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계속 요구할 경우 철수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후 중국과 미국 정부 간의 환율 논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 등 양국 간의 외교 분쟁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음.
- 2월 말 서방 언론에서 구글 해킹의 진원지로 중국 학교 두 곳을 지목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중국 정부 관련인사라고 보도함에 따라 중국·구글 이슈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음. 중국 정부는 구글 해킹 사건의 범인들이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구글 측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음.

● 中 “중·미 솔직한 대화나섰다”(3/4)

- 중국과 미국이 최근 티베트와 대만 문제 등으로 야기된 양국 간 갈등과 관련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4일 중국 외교부가 밝혔음.
- 외교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의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양국이 공통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3일에는 양제츠 외교부장을 면담했으며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관도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 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 구글 사태, 무역마찰 등 각종 현안으로 경색된 관계 개선 방안은 물론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지난 2일 중국을 방문해 2박 3일 일정을 마친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했음. 아울러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이었던 중·미 관계가 최근 2개월새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결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접견하면서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지적했다.
- 친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중·미 양국간 관계 손상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면서 “미측이 중국의 입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양국관계가



균건하고 건강하게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그는 그러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미측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친 대변인은 또 무역관계와 관련해 “중·미 양국은 중요한 동반자라는 점에서 서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측은 특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음.

● 스타인버그 방중..美中관계·북핵 논의(3/2)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일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관계 복원 방안과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함께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 취재진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주중 미국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무장경찰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음.
- 이들은 2박3일로 예정된 방중 기간 카운터파트인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차관급 회동을 할 예정이며 양제츠(楊潔志<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장관급을 넘어 중국 최고 지도부 중 1명과 이들 일행이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중국 측 관료들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 구글 사태, 무역마찰 등 각종 현안으로 경색된 관계 개선 방안은 물론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북핵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베이더 선임보좌관이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미 관계를 비롯한 유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중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는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북핵 문제를 총괄한다고는 해도 이번 방중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중·미관계의 갈등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양국간 3개 공동성명의 원칙과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존중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양국이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궤도로 되돌리길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방중을 마치고 4일 베이징을 출발, 5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 등 미·일간 현



안을 논의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 스타인버그 2~5일 중국, 일본 방문(3/1)

-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핵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2일부터 5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함께 두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1일 출국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중국, 일본 순방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 성 김 북핵 특사의 한·중·일 순방에 뒤이은 것인데다, 6자회담 재개 임박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과 일본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막바지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됨. 한국이 이번 순방에서 제외된 것은 유명환 외교통상장관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국무부 내 고위관리들과 폭넓은 협의를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중국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제 무기판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무역갈등 등 현안을,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이견을 해소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앞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월 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제 무기의 대만판매 계획이 발표된 직후 중국 정부에 의해 전격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美고위급 2명 방중..미-중갈등 봉합될까>(3/1)

- 중국 외교부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 외교부는 친강(秦剛)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방중 의제에 대해 “중·미 관계 등 유관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혀 이번 방중 의제가 양국 관계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관계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음.
-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일자 기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위 관료 2명을 중국에 보내는 것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음.
-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의 위안핑(袁鵬) 소장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방중하는 관료들의 이력에 주목, “이들이 방중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중·미 관계를 중시해 양국 관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협력 관계로 되돌리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음.
- 위안 소장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과거 저명한 아시아태평양 및 중



국 문제 전문가로 중국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중국에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그가 지난해 대중 외교의 틀로서 제시한 ‘전략적 재확인’이란 개념이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 <中, 달라이라마 인터뷰한 CNN에 항의>(3/1)

-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인터뷰를 방송한 미국의 뉴스채널 CNN에 항의의 뜻을 피력했다고 1일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가 보도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최근 CNN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래리킹 라이브’가 지난주 방미 중이던 달라이라마와의 인터뷰를 방송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피력했다.
-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달라이라마의 방미와 CNN의 인터뷰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고 미국과 CNN에 중·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시청자들이 달라이라마의 티베트독립 주장의 진면모와 중·미 관계를 손상시키려는 나쁜 의도를 직시하고 중국의 티베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중국은 그동안 외교부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달라이라마 면담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번에는 주미 대사관 차원의 성명으로 형식을 낮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 CNN 래리킹 라이브는 지난달 22일 “중국이 티베트를 문화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우려하고 있지만 가슴 속에선 중국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는 내용의 달라이라마 인터뷰를 방송했다. 신문은 CNN이 주미 대사관의 항의성명을 반론 보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게재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 CNN은 재작년 티베트 라싸(拉薩) 사태 직후 중국에 비판적인 보도에 앞장서고 진행자가 중국산 제품을 쓰레기로, 중국인을 깡패로 칭한 논평을 한 뒤 중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고 중국인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중국과 악연이 있음.

다. 미·일 관계

● “美, 日에 통보없이 1966년 3개월 핵반입”(3/7)

- 미국이 일본에 사전 통보 없이 지난 1966년 3개월만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미군기지에 핵을 보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 이 신문은 에드윈 라이샤워 전 주일 미국 대사의 보좌관이었던 조지 패커드 씨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패커드 씨에 따르면 1966년 당시 미 핵무기는 이와쿠니 기지 연안의



계류장에 있던 해병대 전차양륙함에 3개월간 보관돼 있었고, 유사시 이와쿠니 기지의 항공기에 탑재될 예정이었음.

- 이런 사실은 일본에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당시 라이샤워 주일 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격노해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철거를 요구했음.
-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안보조약 개정 당시 미국이 일본에 핵을 반입할 경우 사전 협의하기로 했으며,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함정의 일시적 기항이나 통과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밀약’했었음. 당시 라이샤워 대사는 이와쿠니 기지에의 미 핵무기 반입은 ‘통과’나 ‘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 日정부, 8일부터 후텐마 이전안 본격 논의(3/5)

- 오키나와(沖縄)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로 고심해온 일본 정부가 연립 여당 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감.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8일 오키나와 기지 문제 검토위원회(위원장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를 열고 연립여당 일원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5일 밝혔음.
- 올해 예산안의 중의원 심의를 앞두고 중단됐던 검토위원회를 약 20일 만에 다시 열기로 한 것임. 이후 외무성과 방위성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안에 연립여당 대표들이 참석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승인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하토야마 총리는 5일 저녁 기자단에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히라노 장관이 오키나와에 (정부안을) 설명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생각이라고 시사했음.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달 안에 후텐마 이전안을 마련해 5월까지 미국 측과 협상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음.
- 하토야마 총리가 4일 ‘3월 내 정부안 마련’ 언급을 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공식 논의를 서두르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오키나와 내 이전지 두 곳 중 한 곳을 이전지로 염두에 두고 공인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음.

● “日총리, 후텐마 해결못하면 사임해야 할 수도”(3/5)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를 5월 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사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 민주당 전 최고고문이 5일 밝혔음.
-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결정을 내리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이 하토야마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사임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전 고문은 하토야마가 물러나면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이 총리직을 승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하토야마가 분명히 5월에는 미국이 동의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만족까지는 아니라도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음.

● “日, 오키나와 반환대가 美에 1억弗 뒀돈”(3/5)

- 일본 정부가 미국의 오키나와(沖繩) 반환 협정 당시 공식 협정에는 없는 6천만 달러를 25년간 무이자로 미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억1천여만 달러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의 최근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발효된 1972년에 6천만 달러를 미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밝혀졌음.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는 일본이 자산 인수, 핵무기 철거비 등으로 3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돼 있지만 6천만 달러의 무이자 예치 부분은 없음.
- 미 연방준비은행은 6천만 달러에 대해 25년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자에 상당하는 1억1천200만 달러를 오키나와 반환 대가로 공여했다는 추정이 가능함.
- 이와 관련,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6천만 달러를 미 연방준비은행에 무이자로 25년간 예치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음. 그는 하지만 이 돈이 오키나와 반환 대가로 일본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밀약’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2000년 가베 마사아키(我部政明) 류큐(琉球)대 교수는 미국에서 입수한 공문서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 대가로 미국에 6천만 달러를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1억1천2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미일 합의’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당시 자민당 정부는 이를 부인했었음.

라. 미·러 관계

● 미국인 부모 러시아 입양아 살해 파문(3/4)

- 미국인 부모가 러시아 입양아를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러시아 사회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4일 국영 TV 채널1 등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미국인 부부가 지난달 26일 1급 살인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음. 이 부부는 지난 2003년 쌍둥이 누나와 함께 입양한 러시아 남자 아이(7)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아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특히 미국 가정에 입양된 러시아 아이들이 양부모의 학대와 무관심으로 희생된 사례가 끊이질 않는 데 대해 외교적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199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가정에 입양된 러시아 어린이 중 14명이 양부모 손에 목숨을 잃었음. 2008년에는 21개월 된 러시아 입양아가 9시간 동안 차 안에 방치돼 사망했는데 당시 미 법원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서 부모를 석방했음.
- 현재 미국 내 러시아 입양아 수는 중국,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국제법상 입양아 신변에 문제가 있을 시 5일 내에 해당국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알리 수는 다며 미 당국을 비난하고 있음.
- 이번 사건과 관련,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발렌티나 페트렌코 의원은 미국 가정으로의 러시아 어린이 입양 전면 중단을 제안했음. 이미 러시아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미 국무부와 이번 사건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기타

● <中, 동북아 대사 인선 마무리>(3/6)

- 중국이 주한 중국대사로 장신선 외교부 판공청 주임(한국의 정부부처 국장)을 내정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 대사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음. 중국은 당초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문대사가 한반도 전문가라는 점에서 청융화(程永華) 전임 주한대사 후임으로 보내려 했으나 우리 측이 “급(級)이 너무 낮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다른 인물을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특히 대통령 실장을 지낸 류우익 신임 주중 대사가 부임하지 이에 걸맞은 인선을 하느라 장고해왔다는 후문임. 중국은 통상 외교부의 부국장급 가운데 한반도 전문가를 뽑아 주한 대사로 임명해왔음. 따라서 이번에 내정된 장 주임은 중국 외교부 내에서 선임 국장급이라는 점에서 중국 측이 나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 외교부 가운데 판공청은 최선임 부서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중국의 장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신청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절차가 끝나면 중국이 정식으로 장 내정자를 부임시킬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은 앞서 류샤오밍(劉曉明) 현 주북대사 후임으로 차관급인 류홍차이(劉洪才)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내정했음.
- 중국은 아울러 청융화 전 주한대사를 최근 외교부 부부장으로 승진한 추이텐카이(崔天凱) 주일대사의 후임으로 보냈음. 지난 1일 부임한 청 주일대사는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 내 정·재계 인맥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내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로 분류됨. 그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공식 파견된 제1기 중국 유학생 중 한 명임. 197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한편 북한은 현재 최진수 주중 대사 후임으로 외무성의 부부장(차



관) 급인 최병관 전 영사국장을 내정하고 중국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를)을 신청한 상태임. 최 내정자는 1998년에 외무성 영사국장에 임명됐던 인물로 이후 주라오스 대사를 거쳐 2006년부터 다시 영사국장에 보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에 최 내정자가 부부장급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음. 북한의 주중 대사 교체는 만 10년만에 이뤄지는 것임. 북한과 중국은 1949년 수교 이래 상대방에 차관급의 고위직을 대사로 파견해오고 있음.

● 中, 올해 GDP 성장률 8% 내외 목표(3/5)

- 중국이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8% 내외로 잡았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임. 중국 정부는 또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3% 이내로,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할 방침임.

● 中, 올해 국방예산 7.5% 증액(3/4)

-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5천321억1천500만위안 (89조1천66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5%(371억1천600만위안) 증가했음.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 전날인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규모의 2010년도 국방예산을 공개했음.
- 중국이 최근 10년 사이에 국방예산을 한자릿수로 올린 것은 올해가 처음임. 중국은 지난해 15% 등 1999년 이후 최근 10년간 16% 내외로 국방예산을 증액해 왔음.
- 리 대변인은 “전체 국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출액은 5천185억7천700만위안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으며 국방예산은 전국 재정지출 예산의 6.3%”라고 소개한 뒤 “몇 년 전과 비교해 국방비 증가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했음.
- 올해 국방비 증가분은 중국 특색의 군사개혁과 안보위협에의 대응, 다양화된 군사임무의 완성, 개혁수요의 보장, 장병들의 군생활개선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리 대변인은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은 국가주권과 영토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내외로 4%가 넘는 미국과 2%가 넘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리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군비의 투명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다”면서 1998년 이래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와 2007년의 유엔 군



비투명성제도 가입, 국방부 대변인 제도 운영, 국방부 홈페이지 개설 등을 근거로 들었음.

● “양안, 신해혁명 100주년 공동 경축하자”(3/4)

- 중국과 대만이 손문(孫文)의 주도로 청나라의 전제정치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신해혁명(辛亥革命) 100주년을 중국 우한(武漢)에서 공동으로 경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음.
- 우한시 정협 주임인 예진성(葉金生)을 비롯한 우한시의 정협대표단 7명은 4일 제11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3차 전체회의 이튿날 회의에서 내년 10월 10일 신해혁명 100주년을 맞아 이 혁명의 발생지인 우한에서 양안이 공동으로 기념식을 갖자고 제의했음.
- 우한은 신해혁명의 발생지이며 2차 국공(국민당-공산당)합작이 이뤄지는 등 양안간에 공동의 기억이 많은 곳이어서 공동 기념식 개최에 적합하다는 것임.
- 예 위원은 양안이 우한에서 신해혁명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면 이는 양안간 평화통일을 향한 역사적 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지난달 4일 중국이 내년 자신을 우한으로 초청해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 활동을 벌이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양안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보도들과 관련, 양안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일축했음.



[참고 1] 〈中 전인대 정부보고 주요 내용〉(연합뉴스, 3/5)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 보고는 올해 경제성장률 8%와 물가억제선 3%를 달성하기 위해 적자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들을 담고 있다.

다음은 원 총리가 제시한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 **적자예산 확대** = 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경기부양과 내수확대를 위해 적자예산 규모를 1조500억위안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적자예산 규모 9천500억위안보다 10% 정도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재정적자를 8천500억위안으로 작년보다 1천억위안 늘리고 정부 부채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권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2천억위안 발행키로 했다. 원 총리는 이번 조치가 세계 금융위기 직후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구조적인 감세조치, 재정지출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연한 통화정책 지속** = 원 총리는 올해도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광의의 통화(M2)를 17%로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자금도 7조5천억위안 내외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는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하고 출구전략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은 출구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경제발전 방식 전환, 구조조정 강화** = 중국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0대 중점산업의 조정과 진흥계획을 철저히 진행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환경, IT, BT 등 신전략 산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발전자금을 작년의 96억위안에서 106억위안으로 늘려 중소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공업, 교통, 건축업 등을 중심으로 오염원 배출량을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도 추구하기로 했다.

◇ **부동산 집값 잡는다** = 원 총리는 일부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나치게 빠른 집값 상승을 단호히 억제하고 인민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상



업용 부동산 매매제도를 개선하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규범화할 방침이며 토지수입 관리사용방식을 개선하고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도 억제할 계획이다.

중국은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632억위안의 예산을 배정, 보장성 서민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고 낙후된 주택 280만호를 개조해 나갈 방침이다.

- ◇ **취업 촉진, 사회안전망 건립** = 원 총리는 올해 도시 일자리를 900만개 이상 창출해 도시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 433억위안을 투입하고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 확대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는 3천185억위안의 예산을 투입, 도시와 농촌에 사회보장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사회보장시스템 시범 지역을 전국의 23%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분배 제도의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내수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와 가전제품, 오토바이 등을 신제품으로 교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펴나가기로 했다.

- ◇ **대만과 협력·국방 현대화** = 중국은 올해 대만과의 양안(兩岸)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조국 평화통일이란 큰 목표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음.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통해 상생공영하는 양안 특색의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원 총리는 약속했다.

중국은 또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국지전 능력도 강화해 각종 안보 위협과 다양화된 군사임무 수행능력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jsa@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3/05/0501000000AKR20100305088900083.HTML>



[참고 2] <中 외교부장 기자회견 주요내용>(연합뉴스, 3/7)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양제츠 외교부장이 7일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양 부장이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요약한 것이다.

◇ **6자회담** = 지난 1년간 6자회담은 사실 곡절을 많이 겪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란 목표와 6자회담이란 효과적인 다자협의 채널을 포기하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이다.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 각자가 한반도의 비핵화란 목표를 견지하고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6자회담이 재개돼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 세계 금융위기 대응 측면에서 G20 회의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피츠버그 회의는 전 세계 경제 관리개혁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였다.

중국의 이웃국가인 한국이 올 연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 회의와 함께 앞서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회의가 모두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

국제사회가 G20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4대 포인트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 목표 ▲세계경제의 불균형해결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 ▲출구전략 문제 등 거시정책에서의 각국의 협력강화 ▲각종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등이다.

우리는 이번 회의가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란 원칙하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 **미·중 관계** = 작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는 양호한 발전을 했지만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달라이 라마와 면담해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

최근에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중해 중국과 양국 관계와 유관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중국은 양국 관계와 대만, 티베트 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이 양국 간 3대 공동성명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고 양국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뜻도 표명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항을 존중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중국과 함께 양국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건전한 양국 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유리하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의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

- ◇ **러시아와 협력 강화** = 작년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 원자력, 고속철도 등 분야별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올해 말 양국 간에는 송유관이 완공돼 내년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양국은 중국의 동북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지역과의 협력을 중시, 국경을 초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그리즐로프 국가두마(하원) 의장 등과 수차례 회담 및 회동을 갖고 교류를 강화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3월 하순 푸틴 총리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국어의 해' 개막식에 참석한다.

- ◇ **중·일 관계** = 중·일 관계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전통 분야 외에 에너지·환경, 순환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맞고 있다. 아시아에 속한 양국은 손을 맞잡고 아시아의 발전에 함께 이바지해야 한다.

중·일 양국은 '일의대수'의 이웃이다. 동중국해 갈등에 대해 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입장은 매우 적극적이다.

양국은 동중국해 문제에서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원칙적인 공통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소중하게 인식돼야 한다. 우리는 양국이 모두 합의의 정신을 준수하고 문제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동중국해를 평화,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성 건의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 **이란 핵 및 아프가니스탄 등 문제** = 솔직히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사회가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누구나 다 제재와 압력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가 외교적 노력과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 이란 핵 문제를 전면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

군사적 수단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아프간 정부와 인민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아프간 국민이 평화안정, 독립 자주발전, 선린우호란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유엔이 아프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다.

◇ **기후변화 등 기타문제** =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중요하고 적극적인 성과가 도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멕시코 회의에서 중요하고 적극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유럽, 브릭스(BRICS) 국가,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과 양자 및 다자관계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외교의 주안점은 각종 정상회의와 상하이(上海) 엑스포 외교에 맞춰질 것이다. 우리는 국가주권과 안보, 국가이익을 수호한다는 원칙 하에서 전방위 외교를 펼쳐나갈 것이다.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다. 다른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강하게 침해한 뒤 이를 당연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jsa@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3/07/0503000000AKR20100307040400083.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